



영주댐 건설과정으로 보는
개발주의에 대한
생태적 회고

차례

제1장 서론	1
환경정의란	3
사업 추진 배경 및 사업 내용	4
제2장 4대강과 영주댐 건설사업	7
4대강살리기와 영주댐의 부활	9
영주댐 건설사업의 개요	12
영주댐 건설사업의 타당성 검토	14
영주댐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검토	17
댐 건설사업과 주민의견수렴 과정	18
제3장 영주댐 건설로 인한 피해	21
생태·환경 피해	23
문화·공동체 피해	28
영주댐 건설 11년 후, 평은면 사람들의 이야기	30
제4장 개발주의에 대한 생태적 회고	35
참고문헌	41

제 1 장 서 론

- 환경정의란
- 사업 추진 배경 및 사업 내용

환경정의란?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는 환경 관련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모든 사람들이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 받고, 환경적 혜택과 부담의 배분에 있어 공정하게 대우받으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공정하게 구제받는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환경의 혜택을 누리고 피해를 나누는 과정은 인종이나 직업 혹은 소득에 따른 차별 없이 동등해야 하며, 환경 의사 결정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면서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환경정의’는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모든 구성원이 어떤 조건에서도 환경의 혜택과 피해를 누리고 나눔에 있어 불공평하게 대우받지 아니하고, 공동체의 문화와 역사, 주변의 생명체가 지속가능하게 공존하게 하는 것이다. ‘환경정의’는 이처럼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서, 강대국과 저개발국 사이에서 현세대와 미래세대 사이에서, 인간과 자연 사이에서 일어나는 불평등에 대한 정의의 추를 맞추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최근 국내에서는 환경정책과 국토에 관한 정책 수립의 기본 이념으로 ‘환경정의’가 반영되기 시작했다. 2019년 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은 기본이념의 하나로 ‘환경정의’를 명시하였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경 관련 법령이나 조례·규칙을 제정·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며,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정하게 나누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공정한 구제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국토기본법」은 환경친화적 국토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에 관한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집행할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보전 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써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규정하였다.

이처럼 국토의 이용에 있어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국토환경을 조성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로 명시된 ‘환경정의’가 현실의 국토이용과 개발에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지는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과거 개발사업 계획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초래한 생태피해와 주민피해에 대한 반성을 통해,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 추진 배경 및 사업 내용

성장위주의 개발 정책으로 인하여 소수 개발업자들은 손쉽게 개발 이익을 취하고, 환경 악화로 인한 부담은 지역 주민이 떠안게 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개발 정책은 수립 과정에서부터 개발사업의 실행과 평가에 이르기 까지 공공의 참여를 배제하고 추진되어 첨예한 환경 갈등을 야기해 왔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에너지 시설 입지를 둘러싼 갈등은 정책수립 과정의 비민주성과 환경피해에 대한 우려 등으로 심각한 사회갈등을 불러왔다. 밀양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과 영덕 핵발전소 부지 선정 과정의 지역 갈등 사례에서 정부주도의 일방적인 에너지 공급정책과 에너지 생산지역과 소비지역 분리로 인한 지역 간 부정의 문제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주민공청회 파행 등 정책 결정 과정의 절차상 문제, 지역 주민 사이의 찬반 갈등 문제 등을 경험하였다.

개발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 간, 계층 간 불평등과 사회갈등을 줄이고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수립 과정에 균형 잡힌 정보의 제공과 충분한 검토, 이해관계자의 숙의 과정 즉 절차적 정의가 필요하다. 특히 현세대의 편익을 위해 추진된 국책 사업은 현세대 지역 주민의 피해는 물론 생태계 파괴로 미래세대

환경권 침해라는 환경부정의를 발생시키게 된다. 이처럼 국가주도 개발사업의 정책결정과정의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거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나 환경영향평가 부실과 같은 절차상 하자는 생태적 가치 훼손과 주민갈등, 그리고 지역 공동체 붕괴와 같은 회복하기 힘든 사회갈등을 불러오게 된다.

정부 주도 개발 정책으로 추진되었던 사례 중에서 영주댐은 낙동강 수질 개선과 용수 공급을 위해 지어졌으나 준공 후 3년이 넘도록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본 사례조사는 이러한 영주댐 건설 사례를 통해 국가주도 개발사업이 공공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면서 야기한 생태피해와 주민피해를 문헌조사와 현장 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하고, 앞으로 개발사업 시행에 앞서 고려되어야 할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문제를 찾아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환경정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 2 장

4대강과 영주댐 건설사업

- 4대강살리기와 영주댐의 부활
- 영주댐 건설사업의 개요
- 영주댐 건설사업의 타당성 검토
- 영주댐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검토
- 댐 건설사업과 주민의견수렴 과정

제2장 / 4대강과 영주댐 건설사업



4대강살리기와 영주댐의 부활

처음 댐 건설 계획의 시작은 1999년 송리원 다목적댐 건설 계획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낙동강 수계 지역은 페놀유출사고, 벤젠유출사고와 같은 수질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산업화에 따른 오염 부하량이 증가하면서 하천수질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지역이었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종합대책 수립 중 환경개선용수 공급을 위한 댐으로 계획되어 낙동강 하류수질을 2등급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송리원댐’이라는 이름으로 계획되었다.

정부는 1999년 1월 28일 낙동강수계 물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국무총리 특별지시를 시달. 수질 목표는 2005년까지 낙동강 수계 상수원 수질을 2급수로 개선하고 수량목표는 2008년까지 낙동강유역 전 지역에 맑은 물을 풍부하게 공급하는 것.

정부합동 “낙동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 (1999.12.30.)

그러나 당시 계획한 낙동강 하류 수질 개선을 위해서 댐을 개발하더라도 오염배출량이 획기적으로 감소되지 않는 한 신규 수자원이 모두 개발된다 하더라도 하류수질의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렇게 사라지는 가 싶었던 댐 건설계획은 4대강 마스터플랜에 포함되면서 부활하였다.

“과거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상에 낙동강 물부족 문제에 대한 지적은 크게 부각되

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송리원댐이 계획에 반영되고 4대강 마스터플랜에 포함된 배경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낙동강 수질개선 용수라는 게 오염을 희석하기 위해 용수 확보를 댐에서 하겠다는 건데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데도 불구하고 추진한 의도가 뭘까요. 지금도 희석개념의 댐 건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부 관계자가 있을까요?”

<물관련 정책 연구자 C씨 2020>



송리원댐 조감도 (자료출처: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2009.06.25.)

“생활용수, 공업용수 이런 구체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외에 강에서 흐르는 물은 모두 하천유지용수로 분류하는 거 아닌가요? 영주댐은 강물을 댐에 가둬 모아두었다가 갈수기에 내려 보낸다는 것인데, 모래강인 내성천은 하천 바닥의 두툼한 모래에 저장한 강물을 갈수기에도 낙동강에 공급하는 하천생태계 서비스 기능을 잘 해왔어요. 하천유지용수 공급이란 결국 하천생태계를 위함인데, 영주댐 사업은 하천생태계를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하천을 크게 훼손한 매우 모순된 사업이에요”

<내성천 생태 모니터링 조사 참여 생태 사진 작가 2020년>

○ 4대강살리기 사업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국민적 반대에 부딪치자 2008년 14조 1,418억원 규모의 ‘4대강 하천정비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2006년 이미 건설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4대강을 포함한 국가하천정비가 97.3%가 끝났다’고 발표된 바 있다. 2009년 이명박 정부는 ‘4대강살리기 기획단’을 발족하고 ‘4대강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4대강살리기 사업’은 2012년까지 22조 2천억원을 들여 대형보 16개를 설치하고, 부산-안동간 320Km 강 유역을 폭 220m, 평균 수심 6m로 하는 것으로 2009년 마스터플랜 발표 이후 전국의 4대강 공사 현장에서 철야공사를 강행하였다.

이미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운하계획이다”라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문가의 양심고백이 있었으며, “4대강물길잇기, 4대강하천정비, 4대강살리기사업 등은 이름만 명분만 바뀌었을 뿐 사업내용은 모두 한반도대운하사업과 거의 같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었다.

4대강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은 물부족 대비 풍부한 수자원확보, 수해 예방을 위한 유기적 홍수방어 대책 마련,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 복합공간 창조를 핵심과제로 제시하였다. 물부족과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중소규모 다목적댐을 건설하여 용수공급용량을 확대하려고 하였으며, 이를 위해 송리원댐과 보현댐 건설 계획을 마스터플랜에 포함시켰다.

○ 사라진 댐 건설계획의 부활

4대강사업을 밀어 부치면서 댐 건설을 반대하던 지역주민을 설득하기 위하여 대세론과 개발이익, 지역경기 활성화 등을 주장하면서 주민간담회가 진행되었고, 영주시 평은명 금광리에 건설이 계획된 댐은 ‘영주댐’으로 이름을 바꿔 4대강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건설이 추진되었다.



물문화관에서 바라본 영주댐 모습 (2020)

영주댐 건설사업의 개요

영주댐은 낙동강 합수부로부터 약 56Km 상류, 내성천 중류 생태적 다양성이 가장 뛰어난 지역에 세워졌다.

영주댐은 갈수기에 하천유지용수를 공급하여 낙동강 중·하류의 수질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2009년 12월 착공하여 2016년 12월 댐 공사를 마쳤다. 경북 영주시 평은면, 이산면, 문수면 일원에 세워진 영주댐은 높이 55.5m, 길이 400m, 총 저수용량 1억 8천백만 m^3 이다. 총 댐 건설 사업비는 2009년 댐 건설 고시 당시 8,380억 원에서 약 1조 1천 30억 원으로 크게 늘었으며, 댐 공사 이후 댐운영 관리비로 매년 약 4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 '99. 8 : 예비타당성조사(기획예산처/한국개발연구원)
- '04. 9 : 타당성조사(건교부/수공)
- '09. 6 : 기본계획 고시(건교부)
- '09. 12 : 실시계획 고시(부산청) 및 영주댐 건설공사 착공
- '13. 11 : 본댐 축조 완료
- '15. 11 : 이설도로 준공
- '16. 7 : 시험담수 개시
- '16. 10 : 영주댐 건설공사 준공식

영주댐 추진 경위 (자료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6.10.24.)



영주댐 위치도 (자료: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2009.06.25.)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로 약 500억원이 집행되었고,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매년 10억 원씩 지역에 지원되고 있다. 영주댐 상류 낙조 발생으로 인하여 수자원공사는 2019년 1천 99억원의 영주댐 수질관리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환경부는 2020년부터 5년간 226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였다.

영주댐 건설사업의 타당성 검토

○ 수질개선용 댐 건설의 허구

영주댐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2008)에 따르면 수질개선과 생공용수 편익이 97.97%로 댐 건설의 주요 목적은 용수 공급에 있고, 용수공급량 중 91.76%가 하천유지용수로 1조가 넘는 혈세로 낙동강에 물을 흘려보내기 위해 댐을 건설한 것이다. 하지만 내성천은 자연적으로 백두대간의 물을 모아 강바닥의 모래를 통해 정화하고 저장하였다가 갈수기에 흘려보내왔기 때문에 이미 해오던 내성천의 자연적 기능을 댐 건설의 목적으로 하는 것은 건설 필요성에 의혹을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영주댐 건설로 갈수기에 낙동강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체 연간 2억 톤의 용수가 공급되면 그 중 92%인 연간 186백만톤이 하천유지용수로 활용된다. 갈수기 최대 15m³/초의 물을 공급하여 경남 창녕군 남지읍 기준으로 BOD 0.27mg/l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2009.06.25.)

낙동강 수계의 수질오염 사고를 일으키는 기업의 문제와 낙동강 유역의 산업시설 증가로 인한 오염부하량 증가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상류에 댐을 건설하여 해

결하려 함으로써 지역공동체를 해체하고 자연생태계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김재홍 의원 : 송리원댐 건설에 관한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댐의 종류에는 관계용수댐, 생활용수댐, 수력발전용, 홍수조절용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주 송리원댐은 어떠한 용도의 댐으로 건설할 계획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애초 1999년 댐건설이 계획될 때 전국 최초의 식수원 댐으로 건설 할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근 1km 이내는 허용된 농약 외에는 살포하지 못하고 또한 축사는 아예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댐으로 건설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송리원댐은 식수원 물론 다목적으로 하겠지만, 식수원 확보를 최우선적으로 하는 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맞습니까?

김주영 시장 : 송리원댐은 식수원 확보 차원이기 보다는 홍수조절용, 그리고 상공용수 확보, 하류지역 수질보전 등 다목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다목적 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식수확보 댐으로 본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김재홍의원 : 수물민들에 대한 우선적인 관심과 배려는 반드시 선행 되어야 할 분명한 사실이지만 나아가서 인근지역 또는 영주 전체에 대한 장기적인 피해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피해가 있다고 예상하십니까?

김주영 시장 : 지금 피해의 내용도 정부에서 있는 기본계획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시에서 말한 용역에서도 피해 내용을 검토할 것입니다. 지금 일반적으로는 안개일수가 다소 증가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검토 결과로는 아주 뭐 결정적인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133회 영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2009. 03.31>

○ 경제적 타당성의 문제점

영주댐 건설사업의 경제성 분석 결과 B/C 분석 1.015에 불과했다. 이 분석 결과

에는 ‘대체시설비용법’이 사용되었는데 이전 댐 건설에는 사용된 적이 없는 방법으로 대체시설을 어떤 시설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B/C 분석 값이 큰 차이가 난다. 영주댐의 수질개선 편익 산정은 댐의 환경개선용수 공급을 통한 수질개선 효과를 산정한 후, 이 효과를 환경기초시설에 의해 구현하고, 사업비를 추정하여 대체시설로 산정하면서 댐에 의한 하천유량증가효과는 편익 산정에서 제외하고 수질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편익 산정 방식을 취했다.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를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대상으로 적용하여 하수처리장 시설용량을 결정하고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 총 건설비, 유지관리비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편익을 산정하였다. 경제적 편익 분석을 하면서 댐과 내성천을 하수처리장과 하수의 관계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댐 방류수가 하천수보다 수질이 좋아야 한다는 전제가 성립되어야 한다. 즉 댐 상류의 오염수가 댐에서 자정되어 방류되면서 수질이 개선된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영주댐 건설로 인하여 수질은 더 악화되었다.

“영주댐의 경제성 분석에는 보통 댐 건설에는 전혀 사용된 적이 없는 「대체시설비용법」을 사용 했는데 이게 대체시설을 어떤 시설을 설정하느냐에 따라 B/C 추정 값이 큰 편차가 발생해요.”

< 내성천 생태 모니터링 참여 생태 사진작가 2020년 >

○ 수질 악화의 문제점

영주댐 건설이 하류의 수질개선을 위한 하천유지용수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분석과 다르게 영주댐 건설 전후 내성천의 BOD는 크게 악화되었다. 사업 전 영주댐 하류 지역 BOD는 0.5에서 영주댐 건설 후 시험 담수기간 중인 2017년에 2.3으로, 2018년에는 2.7로 올라 시험 담수 기간 중에 녹조 등으로 수질 악화가 심해졌다. 모래강인 내성천이 자연적으로 해왔던 수질 정화와 하천 생태계 유지의 기능을 경제성 분석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4대강살리기 사업 이후 녹조가 심해지면서, 녹조가 하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뿐 아니라 녹조로 인해 발생하는 간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에 의한 인체 영향에 대한 우려와 함께 건강피해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영주댐 2차 시험담수 당시 녹조 (사진제공: 박용훈 생태사진작가)

영주댐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검토

영주댐 건설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요청 통보가 있는 2009년 5월 15일부터 협의 완료가 있는 2009년 12월 15일까지 7개월 만에 환경부와 협의 및 평가서 초안 작성부터 심의, 평가서 본안에 대한 검토 협의 등이 진행되었다. 기간으로 보아 4계절의 자연생태계 변화를 고려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댐 건설로 인한 생태계의 영향을 댐 상류 중심으로 대상지역을 설정하여 하류의 모래를 기반으로 하는 생물종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생략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영주댐 건설사업의 사전환경성 검토에서 댐이 동식물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단 6줄로 언급되었다. 여기서도 모래강을 터전으로 서식하는 흰수마자과 흰목물떼새

에 대하여는 고려되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서는 댐 건설로 인한 하천의 변화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 모래강인 내성천이 댐 건설로 인한 댐 하류의 모래감소와 이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지 않았다. 회룡포의 하상변화에 대하여 댐 건설로 인하여 일부 퇴사량 변화가 분석되었으나, 내성천 유역에서 매년 75만m³의 골재를 채취하면서도 회룡포 모래사장이 유지되고 있는 점을 들어 영주댐 건설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였다. 반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인용한 ‘댐건설로 인한 주요지점 연 유사량 변화’에 따르면 댐 상류의 모래가 영주댐에서 98.71% 포착되어 낙동강 합수부에 이르면 연 유사량이 27% 감소하고 회룡포 일대는 약 33%가 감소하고 무섬마을은 연 유사량이 55%나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하여 환경영향평가와 반대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산정지점	연간 유사량 (m ³)	
	댐 건설 전	댐 건설 후
영주댐 지점	333,352	4,300
내성천 종점	1,219,485	890,433

댐 건설로 인한 연 유사량 변화 (자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014)

댐 건설사업과 주민의견수렴 과정

1999년 처음 송리원댐 건설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영주, 안동갑, 문경·예천 국회의원은 공동으로 건설계획 취소를 요구하였고, 영주시의회 역시 댐 건설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경북 북부 지역 전체가 댐 건설에 거세게 반대하였다. 시의회 의원들은 뛰어난 자정능력과 생태계를 보유한 내성천이 황폐화 될 것을 우려하며 영

주댐 건설에 반대하였다.

“송리원댐만은 지역개발은커녕 영주·봉화에는 전혀 필요가 없는 지역을 말살시키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중하류 지역을 위해서 사업의 타당성이 제1순위로 평가되어 타당성 조사비와 기술설계비를 2000년도 사업비로 요구할 예정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중략)... 1996년 11월 20일, 건설교통부 발표 송리원댐 사업비 중 1,052억원으로 사업기간은 97년에서 2004년까지, 발주기간은 수자원공사에서 97년 터키공사 발주대상 사업으로 발표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항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1997년 1월 3일 영주시장님께서 건설교통부장관에서 송리원댐 건설에 대한 질의에 건설교통부장관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답변해 왔습니다. ... (중략) ... 12월 4일 안동시에서 환경부, 건설교통부, 국무총리실, 청와대 실무진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낙동강 수계 물관리종합대책(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환경부와 건설교통부의 담당국장이 낙동강 중하류의 수질개선을 위해 국내 최초의 갈수조정댐 건설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의원발의로 금년말까지 낙동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안)을 확정짓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송리원댐은 이미 수년 전에 용수공급과 홍수조절용 댐으로 계획되어 추진하려 하였으나 반대에 부딪혀 오던 중에 대통령 공약인 위천국가 산업단지 연내지정과 연계되어 송리원 다목적댐의 용도가 어느날 갑자기 낙동강 중하류 수질개선을 댐으로 변경되었으며 부산과 대구지역 사이의 선수질 개선, 후 위천공단 지정의 문제가 야기되자 양쪽을 모두 다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경북 북부권의 댐 가능지점 7곳을 지정하고 수물지역의 특성이나 지역주민의 의사는 철저히 무시한 채 오로지 정치적 논리로 인구 많은 대도시 개발을 위해서 단순히 용수개발량과 용수개발 단가 등을 평가하여 타당성 제1순위로 발표하고 송리원댐의 건설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제41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송리원댐 건설사업 추진 당시 사전환경성 검토서 초안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 의견에는 평생을 살아온 고향이 수몰되면 고령의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옮길 수 없는 어려움과 400년 넘는 문화공동체의 역사성을 주장하고 있었지만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에 대하여 보상과 관련된 법적 근거와 지급 계획을 밝히면 부분반영으로 기재되었다.

보통 주민 설명회, 공청회의 대상은 수몰예정지 혹은 법령에서 정하는 영향권 내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그러다 보니 하천의 상류부터 중류·하류 지역 주민에게 영향이 미치는 댐 건설 계획의 경우도 주민 의견수렴에서 배제되기도 한다.

“댐 건설로 인한 생태계 영향은 댐으로 인해 모래가 차단되고 강의 역동성이 크게 줄어들지만 댐 하류의 경관과 생태에 대한 분석은 없어요. 봉화지역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지만 댐 하류 예천 주민들에 대한 주민설명회는 없었어요. 현재 진행되는 영주댐 협의체에도 예천 주민들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 댐 건설에 대해 찬반 의사가 형성될 정도의 과정이 없었던 걸로 판단됩니다. 댐 결정과정이 4대강사업 일환으로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고 생각해요. 2010년 이후 부터는 보상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주민 개인 간 갈등이 있었고 이 사업을 강행한 정부와 이 사업의 부당함을 주장한 시민사회의 갈등이 더 컸던 걸로 기억됩니다.”

< 내성천 생태 모니터링 참여 작가 2020년 >

제 3 장

영주댐 건설로 인한 피해

- 생태·환경 피해
- 문화·공동체 피해
- 영주댐 건설 11년 후, 평은면 사람들의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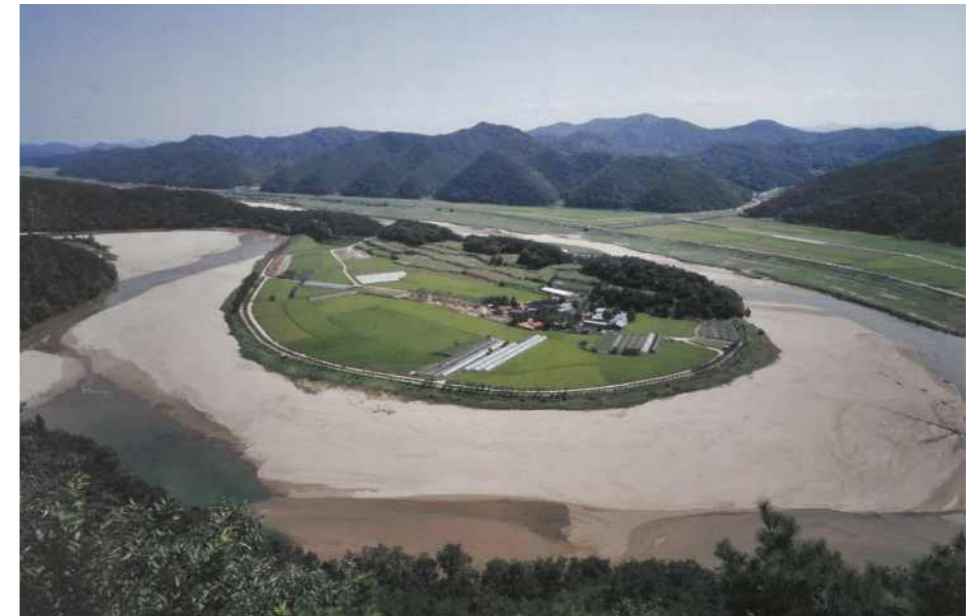
제3장 / 영주댐 건설로 인한 피해



생태·환경 피해

○ 내성천 생태계 특성

내성천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감입곡류로 강이 한바퀴 돌아나가는 경관을 지닌 회룡포는 명승 제16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문화재청에서 명사십리로 소개된 선몽대 일원은 명승 제19호로 지정되어 있다.



명승 제16호 회룡포 2009년 모습 (사진제공: 박용훈 생태사진작가)

내성천 경관의 중심은 모래다. 강이 산을 따라 휘돌며 모래를 운반하며 형성된 거대한 모래톱은 빼어난 경관을 만들고 자연사박물관이 될 정도의 생태계 보고가 되었지만 영주댐 건설 이후 모래톱이 위축되고 식생이 육화되면서 과거의 모습을

잃어 가고 있다.

모래가 발달한 내성천은 고유의 생태계를 지니고 있는데 특히 영주댐이 건설된 내성천은 멸종위기종의 피난처로 불리던 곳으로 먹항새, 흰목물떼새 그리고 흰수마자라는 내성천의 생태적 특성을 보여주는 깃대종으로 서식처의 훼손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내성천은 최상류를 제외하고 강 하상에 고운 모래가 두텁게 쌓여 있어 흰수마자 서식처로 적합한 곳이었다.

○ 영주댐 건설 이후 내성천 모래톱의 변화

영주댐 건설이 시작된 이후 강물이 퍼 나르던 모래가 감소하자 두툼하게 쌓여 있던 모래톱이 얇아지고 수면과 가까워지면서 모래톱에는 식생이 뿌리내리기 좋아졌다. 홍수가 없는 해에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식생이 자리 잡으면서 육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먼저 작은 모래톱에서 먼저 식생이 자라기 시작했고 모래톱이 큰 회룡포 등은 모래톱의 가장자리에서 부분적으로 육화가 시작되었다. 모래톱의 모래가 쓸려나가면서 식생이 자리잡거나 돌이 드러나기도 해 과거의 고운 모래의 내성천은 더 이상 원래 모습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무섬마을 백사장 (2020)

“무섬마을은 모래양도 많고 고운 모래가 마을의 상징이었는데 댐이 생기고 나서 점점 모래가 거칠어지더라고요. 강물이 흐르는 속도도 빨라지고 백사장에는 점점 육화된 식생들이 자라고 모래는 자꾸 줄어들고 거칠어지고. 그래서 주민들이 수자원공사에 가서 백사장 관리가 필요하다고 요구해서 최근에는 장비를 동원해서 모래를 뿌려준 적도 있어요. 또 마을 주민들이 나서서 주기적으로 풀을 베고 내성천의 원래 모습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어요”

< 무섬마을 주민 A씨 2020년 >



영주댐 건설이후 유속이 빨라진 무섬마을 내성천

“영주댐이 건설되면서 내성천에 유사조절지라는 모래차단댐 같은 게 만들어졌어요. 내성천이 흐르면서 나르는 모래를 유사조절지에서 인위적으로 조절하고 막으면서 하류에 있는 무섬마을과 회룡포 백사장은 모래가 줄 수 밖에 없는 거죠”

< 무섬마을 주민 B씨 2020년 >



영주댐 유사조절지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6.10.24.)

○ 멸종위기종 서식처의 훼손

영주댐이 건설 과정에 산림이 훼손되면서 유역 생태계의 연결성이 훼손되고, 수물예정지의 모래를 과도하게 파내었고, 영주댐이 건설된 이후로는 육상화가 곳곳에서 진행되면서 모래톱이 점차 줄어들었다. 영주댐의 이러한 변화는 매년 겨울 내성천을 찾던 먹황새가 2018년 겨울 이후 내성천을 찾지 않게 되었고, 2013년 다목적댐 공사 이후 시험 담수가 시작되면서 댐 상류의 등지 수가 감소하였으며, 2019년 시험담수 때에는 흰목물떼새의 상류 서식지가 모두 잠겨 버렸다.

흰목물떼새는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으로 내성천은 국내 주요 서식처였는데, 영주댐 공사 이후 시험 담수가 시작되면서 댐 상류의 등지 수가 감소하였으며, 2019년 시험담수 때에는 흰목물떼새의 상류 서식지가 모두 잠겨 버렸다.

영주댐 건설로 인한 생태계 피해



내성천의 흰목물떼새

내성천의 흰수마자

사진제공: 박용훈 생태사진작가

1997년 환경부가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한 흰수마자는 2005년부터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흰수마자는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고운 모래로 이루어진 여울에서 서식하는 몸 길이 6Cm 정도의 물고기로 내성천 상·하류에 걸쳐 광범위하게 분포했었다. 영주댐이 건설되면서 과도한 골재채취가 진행되면서 흰수마자 서식지가 훼손되고 2013년부터 평은면 조사지점에서 흰수마자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당시 수물예정지의 흰수마자를 대체 서식처로 이주시키려고 하였지만 2014년부터 2015년 영주댐 수물지역내 조사에서 흰수마자 서식개체는 확인되지 않았다.

“주변 산지를 포함한 댐 상류는 단기간에 전면적인 훼손이 있었어요. 댐 하류 쪽은 댐 공사와 댐 상류 골재채취에 의한 점진적이며 전면적인 훼손이 진행되었어요. 경관 변화에 따른 모래강, 고유생태계와 생물다양성 훼손이 있었고, 녹조가 전혀 없었던 강에 하천유지용수를 공급하겠다고 세운 댐에서 대규모 녹조가 발생했죠. 2019년 9월 시험 담수 이후에 9월 30일 댐 직하류인 영주댐교의 유해남조류 개체 수는 146,710cells/MI 기록했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 내성천 생태 모니터링 참여 생태사진 작가 2020년 >



내성천 식생의 변화 (2020)

문화·공동체 피해

내성천을 따라 봉화, 영주, 예천 등 백두대간 남쪽 사면 아래 마을이 형성되었는데, 이 지역은 문화적으로 조선시대 유교문화가 발달한 곳이었다. 내성천 상류에 위치한 이산서원은 영주지역 최초의 서원으로 조선시대 서원 발달사 연구에 중요한 서원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선몽대는 당대의 석학들이 모여 학문을 논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다.

영주댐 건설로 인해 530여 세대가 고향을 떠나 이주하였고, 지정문화재 15점이 해체되었다. 특히 영주댐 건설과정에 유교문화와 관련 있는 중요 지정문화재가 수난을 겪었다. 장석우 가옥, 장씨고택, 만연헌, 의관댁, 성황당, 심원정, 금광리 까치구멍집, 내림리 모은정, 신천리 경주 손씨 월춘정과 괴헌고택, 덕산고택, 도림서당 괴동재사, 충주 석씨 재사 및 이산서원 등이 해체되었고, 경북 북부지역 최초의 교회인 내매교회와 교회에서 1910년 설립한 영주지역 최초의 사립학교인 사립기독내명학교도 해체되었다. 이처럼 영주댐 건설로 인하여 문화적 자산이 그 본래 모습을

잃었을 뿐 아니라 400년 이상 전통적인 공동체를 이루며 전승해온 문화적 자산이 사라지면서 집성촌을 이루고 살아온 마을 주민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지난 수백년 갈등 없이 지내던 공동체 내부에 경제적 이득을 둘러싼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

영주댐 수몰지인 금강마을은 수몰마을 중 가장 많은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곳으로 영주댐 공사 시작 후 3년여 만에 문화재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삼국시대의 주거지 등 유물이 발견되면서 정밀 발굴조사가 진행되었고, 2014년 고려시대 사찰인 금강사 터와 보물급 유물이 발굴되었다. 금강사 터가 그대로 보존되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영주댐은 공사를 끝내고 2016년 시험담수를 시작하였다.

“2019년 여름으로 접어드는 시기에 댐 담수를 촉구하는 주민 명의를 현수막이 댐 주변을 따라 걸린 적이 있어요. 그동안 지자체에 의해 주장된 명품관광댐 영향과 지난 10년간 매우 불안정한 환경에서 살아올 수 밖에 없었던 이주단지 주민들의 안주 문제, 댐 지원법 영향, 지자체 영향, 지역 정서 등 매우 복합적인 배경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내성천 생태 모니터링 참여 작가 2020년 >

“수몰지 주민들은 찬반 갈등과 보상금에 대한 갈등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 갈등도 많았어요. 이제야 조금 이주한 주민들 사이에 조금 화합이 된다고 봐야 되죠. 사실 우리 수몰지 주민들은 공사 당시에는 고향을 떠나기 싫고, 5년 10년 지난 뒤에 우리가 어디에 사는게 좋겠느냐 하는 것을 고려해서 위치를 우리가 직접 정하려 다녔어요. 이주단지를 정하면서 그래도 고향과 가깝고 사람 사는 동네로 만들자는 생각이 있었어요. 또 토지나 주택이 없는 사람들은 피해만 받게 되니 이 사람들 보상 받는 방법을 생각해보니 수몰지역 주민들이 입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만들자 이야기가 나와서 하게 되었죠. 다른 댐 수몰지 보니 보상금 받아 자녀들 나눠주고 시간 지나서

고향으로 돌아와 고생하는 분들 많다고 하더라구요. 우리는 최대한 어디로 이주할지 위치도 직접 정하고 설계도 직접 정하고 그랬지요. 지금은 시내로 나간 분들 보다 만족도 높아요. 그래서 시내 아파트나 자식들 집으로 가신 분들이 많이 부러워하고 그래요. 농사짓던 사람들이 도시로 가서 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주민들이 노력해서 시내가는 버스정류장도 만들고, 관공서가 들어오도록 주민들이 청원해서 평은면사무소랑 보건소도 우리 이주단지로 들어올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농사짓던 분들이라 세대 당 70평씩 임대주택 사시는 분들도 50평 씩 텃밭을 일굴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거기 모여 동네 이야기도 하고 모일 수 있으니 고향을 떠났지만 모여 얼굴은 볼 수 있는 거지요.”

<영주댐 수몰지 이주단지 입주 주민 2020>



영주댐 건설이후 내성천의 연무 발생 (2020)

영주댐 건설 11년 후, 평은면 사람들의 이야기

댐 건설이 시작되자, 수자원공사(이하 수공)는 내성천 수몰예정지 주민들에게 보상을 시작했다. 400년이 넘게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던 농촌의 공동체는 보상 앞에 형편없이 깨졌고, 수공이 던진 보상금이라는 작은 돌멩이는 가족 간에도 파문을 불

러일으켰다. 수공이 제시한 보상금은 삶의 터전을 옮기기에 부족했고, 특히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은 터무니없는 보상인데, 작은 보상마저도 수공에게 우호적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갈라졌다.

“수몰예정지에 있던 내매교회는 1909년에 지어진 사립기독교내명학교(기독교사적지)를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건물이었지만 수공은 건물의 역사성을 부정하고, 오래된 건물이니 감가상각이라며 오히려 보상이 작아져서 이천만원을 보상금으로 정하더라구요. 지금의 자리에 이사해, 건물을 복원하고 나니 교회는 오히려 빛더미에 앉았습니다.



한국기독교 사적11호 내명학교 이건축업 (사진제공: 내매교회)

돈만 던져주는 수공의 보상금 때문에 가족해체를 겪은 분들도 많아요. 수몰지 어느 노부부는 보상금을 받아 자녀들에게 모조리 나눠줬는데 그 후에는 아무도 노부부를 모시지 않아서 갈 곳이 없어 결국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고 해요. 또 수공이 제공해주는 이주단지에 입주하고자 했던 젊은 부부는 건설이 진행되면서 보상금으로는 도저히 이주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집이 아직 다 건설되지 못한 상황에서 오갈 데 없어진 부부는 어린 자녀들을 남기고 세상과 이별을 택했습니다.“

수공이 준 보상금이 그들의 삶을 막다른 길, 극단적 상황으로 몰고 간 것이다. 수공의 보상금은 오랫동안 함께 살아간 마을 공동체를 깨지게 만들고, 가장 끈끈한 가족까지도 해체되게 만들었다.

댐건설과 관련한 정보를 빨리 접한 사람들은 그나마 보상을 더 받을 수 있었지만, 나이 든 노인들은 적은 금액에 울며 겨자먹기로 이사를 갈 수 밖에 없었다. 그나마 자식이 보상을 정할 때 함께 있었던 노인들의 형편은 나았으나, 자식마저 가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의 손에는 적은 보상금이 책정되었다. 평생의 터전과 맞바꿨음에도.



수몰지역 주민 이주단지 (2020)

"수공은 마치 깡패처럼 힘없는 노인들의 평생 삶의 터전을 빼앗아 댐을 건설했어요. 보상금액이 정해지자, 수공에서는 이사를 아직 가지 못한 주민들의 집에 공탁을 걸었어요. 공탁금을 찾지 않은 가구에는 강제집행이 시작되었어요. 특히 안동법원에서 온 집행관들은 갈 곳이 정해지지 않은 노인들의 집에 들어와 집행문을 읽고 집을 에워싸고 아직 장롱도 냉장고도 꺼내지 못한 집에서 이사를 독촉했어요. 교회가 나서 수공과 노인 사이를 중재해 시간을 벌여 한 달 남짓한 시간 안에 이사를 가는 것

으로 합의했지만, 그 기간 동안에도 힘겨운 싸움이 이어졌죠.

겨우 이주단지 안에 있는 빌라에 세입자가 되거나, 운이 좋거나 땅이 조금 있다면 영주 시내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나 그곳에는 노인들이 할 일이 없었어요. 평생 땅을 일구며 살아왔는데, 아스팔트로 가득한 시내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노인들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이 말라갔어요. 온종일 텔레비전을 보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은 없었고, 아파트 노인정이라도 가려했지만, 다른 곳에서 이사 온 외지인에게 노인정에 가는 것조차 기존 노인정 구성원들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해요."



이주한 내매교회 (2020)

내매교회에서 만난 목사님은 보상을 둘러싼 가족 해체의 아픔은 자연을 죽이고 인간의 생명을 죽이는 어둠의 힘 때문이라고 표현하였다. 이미 수몰지에 대한 보상은 끝났지만, 수몰 이후 주민들의 아픔을 달래주려는 노력은 어디서도 찾아 볼 수 없었다고 지적하며, 개발로 인해 이주를 할 수 밖에 없다면 주민을 위해 공동체를 유지하고 삶을 근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016년 출향민 모임 (사진제공: 내매교회)

평은면 주민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출향민 모임을 조직해 파편화된 삶을 다시 작은 공동체 모임을 통해 회복하려는 시도와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주민들은 400년 넘는 세월을 가족으로, 공동체로, 삶의 근간으로 유지해 온 뿌리를 잃고, 이주에 따른 생활기반의 변화를 겪게 된다. 이러한 변화로 삶의 위기를 불러온 사례들을 통해 이주와 정착이 단순한 보상금의 수준 문제가 아닌 생활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삶을 지속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필요를 보여준다.

지역 주민의 삶이 파편화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가치를 평가하고, 개발사업 이후 이주민의 삶의 질 문제를 개발사업 추진 전에 고려하고 사업 추진 후에도 사후영향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제 4 장

개발주의에 대한 생태적 회고

제4장 / 개발주의에 대한 생태적 회고



경제적 타당성 부족과 주민 반대로 인해 사라진 송리원댐을 다시 부활하도록 만든 것은 4대강살리기 사업이었다.

2018년 4대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가 진행되면서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환경부의 수질개선 대책 등에 대한 감사결과가 발표되었다. 2008년 한반도 대운하 사업 중단을 선언한 이후 2개월 만에 국토부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하천정비 사업 추진 지시를 받고 4대강사업에 착수하였는데 초기에는 제방보강과 준설로 홍수 방지를 위한 사업계획으로 보고되었다가, 보설치와 수심 6m를 주장하는 대통령 지시를 반영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로 발표되었다.

감사결과 국토부는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 수립 과정에 물그릇을 8억 톤으로 늘릴 것과 낙동강 최소수심을 6m로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결국 이 지시가 어떤 근거로 산정되었는지, 지시내용이 타당한지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을 하지 않은 채 낙동강 최소수심 4m(상류) ~ 6m(하류), 보 16개 설치, 7.6톤의 수자원 확보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수락을 받았고, 6월 8일 최종 마스터플랜이 발표되었다. 또한 환경부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은 하천 호소화에 따른 수질 오염 우려와 문제 발생 시 치유가 거의 불가능함을 보고하였으나 조류 발생 문제에 대한 표현을 삼가달라는 대통령실의 요청을 받고, 보고서에서 조류와 관련된 문안을 삭제하거나 순화시켰음이 감사 결과 확인되었다.

이처럼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과정은 타당성에 대한 기술적 검토나 환경영향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지 않고 정책결정이 이루어졌음이 감사결과 확인되면서 국가주도의 개발사업의 비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기간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검토하기로 하는 등 엄청난 국가 예산이 들어가

는 개발사업의 필요성 검증과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등 관계 법령에 마련된 기본적인 절차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재해예방 사업’을 면제대상에 포함 시켜 준설 및 보 건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일괄 면제하였다. 이처럼 정부 주도의 개발사업은 종종 정치적 결정에 의해 추진되면서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하게 만들기도 한다.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공공사업이 고시되면 합당한 경제적 보상만 합의가 되면 개발 사업은 추진된다. 영주댐 건설 사업도 400년 이상 공동체를 유지해온 역사문화적 가치가 훼손되고, 그 속에서 삶을 유지해온 수몰지 주민의 삶의 근간은 뿌리채 흔들렸다.

“환경의 가치나 문화적 가치와 같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업당사자가 선정한 감정평가사와 수용당사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사가 참여하여 토지수용 감정가격을 평가하게 되는데 사실 감정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기 때문에 보상가는 크게 차이나지는 않아요. 무엇보다 문화적 가치와 보전을 우선 하는, 이전과는 다른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연 환경 훼손에 따른 피해의 경우도 환경의 가치를 우선해서 대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한거죠. 돈으로 따지면 법원에서 다툴은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경제적 가치 이상의 문화적 가치, 환경의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주는 삶을 파편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죠. 돈으로 하는 보상은 마지막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필요한 것은 원상회복이죠. 환경도 원상회복이 필요하고 주민의 삶도 새로운 터전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원래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방법이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 환경전문 변호사 2020 >

영주댐이 건설된 내성천은 한국에서 모래가 가장 발달한 강으로 주목받는 곳이다. 영주댐 인근 무섬마을에서 만난 독일의 생태 전문가는 독일에 내성천이 있었다면 어찌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을 것이라고 했다. 내성천은 백두대간의 맑은 물이 산지를 따라 흐르면서 많은 모래를 실어 나르고 모래는 강이 휘도는 자리마다 쌓여 백사장이 어우러지는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다. 2010년 한국을 방문해서 내성천을 둘러본 미국 버클리대학교 랜디 헤스터교수는 ‘은퇴하고 여생을 보내고 싶은 곳’이라 극찬을 한곳이 내성천이다.

영주댐은 건설 계획 초기부터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과 생태 훼손에 대한 문제가 큰 개발사업이었다. 하천에 만들어 놓 유사조절지는 물과 모래의 흐름을 바꿔 놓았고, 유속이 빨라지고 모래 알갱이가 굵어지면서 멸종위기종이 살던 내성천은 영주댐 건설 이후 생태계 변화와 녹조피해를 걱정하게 되었다.

환경정의연구소는 영주를 찾아 댐 개발 이후 지역사회와 내성천의 변화, 주민의 삶의 변화를 들어보았다. 수질개선 용 댐이 정말 필요했을까? 개발정책 수립 당시로 돌아가 다시 질문한다면 우리는 지금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개발이 이루어지는 현장의 환경파괴와 공동체 해체, 그리고 그 영향을 받는 주민의 삶의 문제까지 고려하는 개발계획에 대한 윤리적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참고문헌



- 김 승 (2001) “물부족 문제해결을 위한 수자원정책의 발전 방향” 국회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간담회 자료
- 명호 외(2017) “생물다양성과 서식지 관점에서 본 4대강사업의 문제점”, 국회의원 이상돈 정책보고서
- 박용훈 외(2019) “내성천 생물다양성 보전”, 국회의원 이상돈 정책보고서
- 박용훈 외(2016) “영주댐 건설과 내성천 경관·생태 보전 문제”, 국회의원 이상돈 정책보고서
- 홍성태(2010)「생명의 강을 위하여」 현실문화
- 건설교통부 (2001.12) “댐건설 장기계획(2001~2011)”
- 국토해양부 (2012.12) “댐건설 장기계획 (2012~2021)”
-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2009.06.25.) “영주(송리원) 다목적댐 건설사업 착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6.10.24.)
- 감사원 보도자료(2018.07.04)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
- 영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1999.12.09.)
- 영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2009.03.31.)
- 영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2009.07.23.)
- 정부합동 (1999.12.30.) “낙동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
- 경향신문 (2010.04.05) “주민 10년 저지 영주댐 4대강 명분 강행”
- 영주시민신문 (2009.04.23) “송리원댐 첫 주민 설명회, 주민불안감 팽배”

- 오마이뉴스 (2020.08.15.) “이런 외나무다리라면 원수라도 화해하겠네”
- 프레시안 (2020.06.04) “영주댐 정상운영 가능한가? 환경부 답변 없어”
- 프레시안 (2020.06.08) “무용지물 영주댐, 감춰진 진실과 환경부의 꼼수”
- 프레시안 (2020.06.16.) “영주댐 오염의 현장 약품 투입됐나?”

영주댐 건설과정으로 보는
개발주의에 대한 생태적 회고

2020. 8. 31

문의 : (사)환경정의 부설 환경정의연구소

eco.or.kr 02-743-4747

세상을 바꾸는 작은변화. 이 보고서는  아름다운재단 지원으로 제작하였습니다